

아동 인권 침해

# “한국, 아동 탈취범 안전지대” 미 의회서도 질타 쏟아졌다

“또다시 아내 집에 가련 체포할 겁니다.”

지난 1월 19일 부산의 한 경찰서. 한국인 형사의 말에 미국인 마이크 펠론(50)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8월 그의 아내 이모씨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탈취해 사라진 뒤 미국 법원으로부터 아동 반환과 양육권 결정을 받아 한국에 온 그였다. 한국 법원도 그에게 면접교섭을 허가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내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결정이 담긴 서류는 쓸모가 없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미국대사관에 연락한 뒤에야 그는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 국무부, 3년째 한국 ‘아동 탈취’ 지적

법원의 시계를 느렸다. 아동 탈취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은 각국 법원이 반환 청구 접수 후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지난 5월 펠론의 반환 청구가 접수된 지 반년이 지나야 아들의 반환을 결정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펠론이 법원 결정을 가집행하려 갔을 때 아내는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법원 집행관이나 경찰에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아들을 탈취당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펠론은 여전히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탈취당한 아이를 찾아 한국에 건너온 외국인들 사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 아내에게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강남역 앞을 달리던 ‘러닝머신 아빠’ 존 시치는 4년 6개월만인 지난 4월에서야 아이들을 되찾았다. 반면 ‘시애틀에서 온 아빠’로 알려진 치과의사 제이 성은 아직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2019년 미 연방수사국(FBI)은 성씨 아내를 아동납치죄로 기소했고 한국 법원도 성씨의 양육권을 인정했지만 성씨 아내 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의회에서도 “한국은 아동 탈취범의 안전지대”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인권위원회 의장은 한국의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경제 제재를 가해서라도 한국이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이미 미 국무부로부터 3년 연속 헤이그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된 상태다. 이 명단에 오른 16개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현재에선 아동 탈취 논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내년에도 미이행 국가로 재지

부모 중 한 명이 아이 데리고 잠적 미·유럽, 아동학대 중대범죄로 판단 한국선 “부모와 있는데 뭐가 문제” 법원도 경찰도 미온적으로 대응 아이 찾으러 한국 온 아빠는 발동동



존 시치가 지난해 4월 경기남부 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돌려달라며 ‘러닝머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셸 버니어 토스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도 청문회에서 “한국의 집행관들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아 아동 반환 판결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이그 협약은 불법적인 아동 탈취를 막고 아동이 평소 자라던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됐다. 헤이그 사법회의도 아동이 자라던 익숙한 장소로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동 탈취로 인해 한쪽 부모와의 만남이 오랫동안 제한될 경우 아동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도 2012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뒤 관련 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미국인 피해자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미 의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됐다.

이처럼 헤이그 협약의 아동 반환 규정이 정착 국 내에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의 아동 탈취에 관한 사회적 정서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있다. 오랫동안 아동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 온 미국과 유럽 각국은 한쪽 부모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탈취하거나 숨길 경우 심각한 아동 학대라고 판단하고 중대 범죄로 대응하는 데 반해 한국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엘 헌터 엘라베마데 교수도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실제로 미 연방법은 부모의 일방적인 탈취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선 부모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잠적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펠론처럼 아

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한국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제시해도 오히려 스톱킹이나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촌극마저 벌어질 정도다. 펠론의 사건을 맡고 있는 황윤정 변호사는 “한국 법원도 아동을 탈취한 한쪽 부모가 시간을 끌며 반환을 거부하는 데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사건 해결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인권·복지 훼손하는 게 문제의 본질”

코트니 매티슨(26)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출산 후 거주하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빼앗긴 뒤 좀처럼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부모에 의한 아동 탈취는 성별이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러한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훼손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는 “미국과 유럽에선 아동을 탈취한 뒤 다른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부모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부모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더라도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도 큰 만큼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 아동 학대 86%가 부모 ... ‘또 다른 정인이’ 지금도 울고 있다

44명. 지난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아동의 숫자다. 2020년 10월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아동 학대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원이 2015~2017년 아동 번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00건 중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90건에 그쳤다.

특히 최근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 학대 통계에서도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전체의 85.9%에 달했

다. 4년 전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도 입양 가정의 부모였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2021년 아동 학대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 학대는 오히려 늘어만 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2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때도 아이는 친 부모가 이혼한 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모와의 만남도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간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받아야만 했다.

정부도 논란이 커지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도 부족해 전담 공무원 한 명이 아동 학대 의심 사

‘정인이 사망 사건’ 4년 지났지만 신고 의무자·가해자 같아 쉬쉬 일쑤 외상 없는 정서적 학대도 늘어나

다”고 말했다.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자와 학대 가해자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학대 당사자이다 보니 신고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 구별이 힘든 데다 아동이 사망했을 때 학대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더욱이 이혼 가정일 경우엔 한쪽 부모의 학대를 다른 부모가 감지하거나 제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외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조영희 이영심리상담연구소장은 “아동 상담을 하다 보면 걸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이인데 내면에서 심각한 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잖다”며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어린아이들은 고통을 밖으로 호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적으로 심하게 손상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중대 범죄로 다루는 것도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 근절해야 ‘폭력이 폭력을 낳는 학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설명이다. 공해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인이법 통과 이후 아동 학대 대응이 강화됐지만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찾아내는 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건강·신수민 기자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세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